

1. 한 사람의 소신과 대통령의 의무 사이에서

대통령의 고뇌, “이런 사람들에게 몇 명을 손에 쥐어준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국에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정책에서도 자주국방과 자주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북핵문제와 대미의존적 안보구조는 빈번히 대통령의 정책 선택의 폭을 제약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결정도 내려야 했다. 그런 대통령의 고뇌는 이라크 추가파병에서 절정에 달했다.

2003년 10월 12일 일요일, 모처럼 집에서 일찍 점심을 먹고 나서 샤워를 하는 데 아내가 황급히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몸의 비눗기도 채 씻어내지 못한 채 전화를 받자 대통령의 음성이 울려 나왔다. “지금 뭐해요? 점심이나 같이 하지.” “예, 점심 먹고 나서 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나 한잔 합시다” “예, 곧 들어 가겠습니다.”

3월에 NSC 차장으로 부임한 후 대통령이 휴일에 직접 집으로 전화를 해서 호출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무슨 일일까? 서둘러 청와대 관저로 차를 몰았다. 푸르던 잔디가 살짝 누런 기운을 띠기 시작한 10월의 정원이 내다보이는 응접실에서 대통령은 예의 털털한 동네아저씨 차림으로 나를 맞았다. 평소 같으면 부속실장이나 누가 배석하여 기록을 할 텐데, 그것도 없었다. 참모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면담할 때 배석자가 없다는 것은 독대의 폐해를 경계하는 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상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이러한 면담에서 정책이 결정되거나 대통령 지시사항이 하달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냥 얘기나 하자고 불렀어요.” 대통령의 말씀 톤으로 보아 긴급한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감축, 북핵문제, 용산기지 이전, 자주국방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은 대형 외교안보사안이 지뢰처럼 널려 있던 때라 대통령이 부르는 이유를 단정하기 어려웠다.

대통령은 끊었다던 담배를 꺼내 물었다. 역시 이라크 파병 얘기였다. 바로 이틀 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가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과와 함께 이듬해 총선 결과를 ‘재신임’으로 받아들일겠다는 메가톤급 발언을 한 직후인지라 속이 여간 복잡하지 않을 텐데 그 와중에도 이라크 파병 문제를 챙기는 것이 놀라웠다. 아마 청와대 밖의 언론이나 정치적 경쟁자들은 대통령이 지금쯤 자신의 정무참모나 여권 인사들과 한참 재신임 정국을 돌파할 묘안을 짜고 있으리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재신임’ 문제가 아니라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였다. 그만큼 대통령의 고뇌가 컸다는 뜻이다. 사실 밖에서는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워 보였지만 대통령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통령에게 고통을 안겼다. 대통령은 ‘파병을 할 것인가?’를 두고 근본적인 질문을 수없이 던지며

스스로 답을 찾고 있었다. 추가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대의와 명분을 중시하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 대통령의 괴로움에 견줄 바는 못 되지만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의 마음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취해야 할 길과 자신의 기질·명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고, 그것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깊은 번뇌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사실 치열한 국제정치 현실을 떠나 개인 노무현으로 볼 때 이라크전쟁은 결코 세계평화를 위한 전쟁도 정의의 전쟁도 아닌 침략 전쟁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는 우리 군대를 파병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미국은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든다는 의혹만으로 이라크를 공격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대내외적으로 명분이 없는 일인 것이다. 앞서 봤듯 대통령은 봄의 1차 파병 때도 “전쟁 참여의 명분을 말하지 말라”며 삭제토록 지시했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이곳 청와대에 사인(私人) 노무현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는 이 자리에 존재하고, 한미동맹이 그 앞에 있다. 그리고 앞뒤 겹 것 없이 이 동맹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야 국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절반의 국민이 있었다. 추가파병은, 한국전쟁 당시 5만여 명의 자국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미국에 대한 도리라는 정서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들뿐이라면 때로는 양해를 구하고, 때로는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대의를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북핵문제가 있었다.

우리 앞에는 미국과 손잡고 풀지 않으면 해결이 요원한 북핵문제가 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응징할 기세로 가득한 부시정부와, 여기에 맞서 미국에 달려드는 호전적인 북한 사이에서 충돌을 막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파병할 경우,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해 다소나마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파병을 거절할 경우 발생하는 긴장이다. 아마 부시정부의 성격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겠다는 우리의 의견이 마냥 존중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부시정부는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기는커녕 북핵문제에서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이런 전략적인 상념을 거듭하며 최선의 결론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가 노무현의 입장에서 추가파병은 심각한 내상을 입는 것이었다. 그가 추가파병을 결정하면 지지세력의 절반을 잃고, 또 나머지 절반의 지지자들은 단지 “노무현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고통스럽게 추가파병에 찬성할 것이다. 이미 여론조사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불행한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9월 18일 청와대 여론조사비관실의 보고에 따르면, 조사 주체의 이념적 성격에 따라서도 파병 찬반의 분포도가 확연히 달랐다. 추가파병에 대해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66.3%, 반대 33.7%가 나온 반면, 『한겨레』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37.7%, 반대 62.3%가 나왔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찬반과 참여정부에 대한 호감도에 따른 찬반이 모순적인 경향을 보이는 묘한 민심 속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 『경향신문』 조사에서는 찬반이 각각 50%를 나타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9월 29일 한미동맹 50주년 기념 만찬에서 허바드 주한 미대사에게 이라크 파병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파병하기로 결정하면, 이 중 절반 정도가 나에게 대한 지지를 이 이유만으로 철회할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나를 위해 ‘파병 반대’를 철회할 것입니다. 또 지금 파병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치적으로 나의 반대자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 절반을 잃는 문제를 고려요소

에 넣지 않았다. 대신 파병 요청의 '수용'과 '거절' 사이에서 균형추를 기울게 할 요소는 북핵문제라고 결론지었다. 대통령은 북핵문제로 불안정해진 한반도 평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향적 입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여러 회의에서 반복해서 우리가 추가파병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 상황의 안정이 그 전제가 돼야 한다고 하며 북핵문제의 진전을 강조했다.

고심을 거듭하면서 대통령은 결국 추가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사실 미국이 추가파병을 요청해오는 순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미 우리 사회 보수층과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의 파병 거부를 동맹파괴로 간주하는 분위기였다. 게다가 북핵·주한미군 재배치·감축·경수로 공사 중단 등 난제難題로 가득 찬 한미관계 현안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내 여론도 반으로 갈렸다. 그러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은 어떻게 추가파병을 노잣돈으로 해서 북핵문제 해결의 길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 병사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와 성격의 부대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NSC사무처는 이미 대통령께 소규모 비전투병 파병 쪽으로 결정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한 상태였다.

그런데 정부 내에는 대통령이 자기 철학에 반하면서 파병을 결정해야 하고, 그것이 정치적 지지기반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이해하는 외교안보 참모들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대체로 이라크전쟁은 미국이 세계평화를 위해 주도하는 명분이 있는 전쟁으로 인식했다. 비록 대통령의 인식이라 공개적으로 토를 달지는 못하지만, 이 전쟁의 성격을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다분히 '반미적'이라고 터부시했다. 그들은 지금이 대규모 파병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석유가 무진

장 매장되어 있는 이라크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군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모처럼 현장에서 군사작전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얘기도 나왔다. 더욱이 그들은 주한미군 감축 협상을 공론화하겠다고 나서 미국과 불협화음을 낸 상황에서 동맹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국익을 위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한미동맹과 뜬구름 잡는 식의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대의명분과 우리 장병들의 희생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하는 관리는 드물었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미 우리 국방·외교 부처의 관리들이 지닌 심각한 대미의존성을 몸소 체험했다. 대통령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인계철선의 상실이라고 우려하고, 수십만 평의 반환 토지를 포기하고서라도 용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잔류시켜야 하며, 주한미군 감축 협상의 공론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등 자신의 국방철학과 반대되는 목소리에 둘러싸인 채 지난 8개월을 보내왔다. 지금은 추가파병과 관련해서 이들과 수차례 회의도 했고, 보고도 받았다. 그래서 아무리 동맹이라도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미국과 의연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그들에게 쉽게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대통령이 보기에는, 가장 신임하는 운영관 외교장관조차도 자신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한번은 윤 장관이, 파병에 미온적인 대통령에게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을 조속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강수를 두었다. 어느 날 관저 만찬을 겸한 비공개 외교안보관계 참모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파병 관련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한 미국측 반응이라며 주한미대사관에서 본부에 보고한 외교전문을 꺼내 작성한 듯 읽기 시작했다. 미국의 한반도 관계 과장급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전문이었다. 내용은 대체로 한국 정부가 추가파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핵과 파병을 연계하려 하며, 부시정부의 북핵 정책에 협

조하기보다는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소 위협하는 것이라고까지 느낄 만큼 강하게 한국정부를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한미동맹의 미래를 비판하는 얘기들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미국이 자신들이 희망하는 수준의 추가파병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노무현정부를 길들여보겠다는 속내를 보인 메시지였다.

그런데 아무리 상대국 고위 지도자의 발언을 실은 외교전문이라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보고서 형태로 다듬는다. 더욱이 상대국 실무자급 인사의 발언이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 보고서에 담지도 않는다. 그러니 그 외교전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 대통령 앞에서 읽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예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민감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장관이 이를 결행한 것을 선의로 해석하면 그는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래서 미국이 참여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알려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은 NSC사무처를 통해 미국 조야의 반응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었다. 외교장관이 본 현실은 미국이라는 장벽 하나지만, 대통령은 미국과 우리 국민, 그리고 역사라는 요소들이 뒤엉킨 더 복잡한 현실 속에서 냉철하게 해법을 찾고 있었다.

윤 장관의 ‘읽기’가 끝나자 일순간 좌중이 싸해졌다. 그러자 대통령이 한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난 뒤, 비장한 목소리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대통령은 보고를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국가존엄이 상처를 입었다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반기문 외교보좌관이 미측 실무자 발언일 뿐이라며 외교전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얼굴은 분노와 비통에 싸였다. 대통령은 평소 한미관계에서 느꼈던 소감을 털어놓으며 한미관계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자신이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이 불평등한 관계를 고쳐가겠노라고 했다. 그는 노기를 누그러뜨리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내 시대에 내가 노력하다가 한미관계가 깨지면 다음 대통령은 보다 균형된 한미관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갔다. 대통령은 내게 탄식조로 말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몇 명의 파병 숫자를 손에 쥐어준들 그것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 엄두가 나지 않아요.” 대통령의 한숨이 길게 내 귀에 울렸다. 대통령의 좌절에 가까운 토로에 추가파병 실무책임자로서 나는 책임감과 송구함에 온몸이 오그라들었다. 그러면서도 용기를 내서 이미 보고한 내용을 가다듬어 다시 말씀드렸다.

“대통령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국은 애초에 3000~5000명의 경보병 사단 병력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3000명 정도에 규모를 맞추어도 미국의 희망치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니 할 말이 있습니다. 부대 성격에 대해서는 미국이 의료·공병을 보내는 것을 반대하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라크 재건지원에 초점을 맞춘 비전투 부대를 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과 NSC의 한국형 모델 모색

미국 정부가 이라크 치안유지를 위해 사단 규모의 전투병력을 추가 파병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은 2003년 9월 4일이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약 600명의 공병과 의료병으로 구성된 서희·제마 부대를 2003년 봄에 파병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가파병 요청이었다. 롤리스 부차관보가 추가파병을 요청하며 예시로 든 병력 규모는 최소한 3000~5000명 정도로 구성되는 1개 경보병 전투여단을 갖춘 폴란드형 사단이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예시였을 뿐 미측은 가능하다면 더 많은